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해 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참여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부패·갑질·법률위반 등 신고 하세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달 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 공식 운영한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에 접

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나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1년 매출 1130억

전년 863억 비 31% 늘어 역대 최대

경기도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2018년 누적 매출액이 1,13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50억 원 대비 22.6배, 전년도인 2017년 매출액 863억 원 보다는 31%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매출액 증가 원인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와 직매장 확산 및 지원사업 확대를 꼽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직매장 건립비용과 연중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확충을 집중 지원해 왔다.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포장재 제작비용, 소비자 교류행사 등 6개 사업



경기도내 로컬푸드 직매장내 전경. /경기도

에 57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도는 2018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8개 시군에 44개로 확대했다. 현재 참여 농가는 9,803농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참여 농가당 매출액은 1,153만 원으로, 농업인 중 특히 중·소농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김승열 기자

## 경기 용인, 경안천 ‘수해예방’ 시민품으로

용인 경안천이 수해예방 능력을 강화한 지역주민들의 승리로 재탄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착공 6년 만에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모현면 일산리 일원 6.4km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 공사 착수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총 사업비로 492억 원이 투입됐으며,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함은 물론, 경안천 주변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약 3,300여동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단지가 밀집한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을 포함, 경

안천 수계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통행이 차단되던 하천 초부교(L=116m)와 독점교(L=97m)의 재 가설 작업을 실시해 도민의 통행 편의 증진에도 힘썼다.

아울러, 제방 관리용 도로와 총 970㎡ 규모의 수변공원 3개소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윤학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 조성 및 친수 공간 제공”이라며 “도민의 하천 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김승열 기자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올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최대 4500만원 ‘10년간 무이자’  
신혼부부엔 최대 6500만원까지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500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총 8572가구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받았다.

시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도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자녀

유무를 우선순위로 조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제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소유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28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존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지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

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인터넷 신청 접수와 방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 탄탄해진다

서울시, 2019년 달라지는 정책

기초보장제도 수급문턱 낮춰  
‘긴급복지’ 예산 2배 확대 편성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SOS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 11개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렸다.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폭염 때 2434가구에 8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중로 고시원 화재 사고 때 59가구에 1900만원을 지원했다. 예년과 비교해 150% 편성된 예산으로 한과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은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했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어르신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는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7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20개소를 운영한다.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 등에 각 1곳씩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왔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에 확대 제공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내 제설함 1만여개 점검나서

부족 자제 보충, 청소 마쳐

서울시는 시내에 설치된 제설함 1만 2679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이면도로 고갯길, 고지대 등 제설 취약지역 1만2330곳에 설치된 제설함에 염화칼슘, 소금, 삽 등을 보관하고 있다.

보행자가 많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변 보도 349곳엔 너가래와 빗자루 등을 제공하는 제설도구함이 비치돼 있다.

시는 지난달 제설함 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제설자제를 보충했다. 청소도 마쳤다. 향후 제설함 관리를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설함이 비어있거나 제설도구 대신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경우 시민 누구나 서울시 응답소,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제설함 모습. /서울시

신고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갯길 등의 제설취약지역에선 제설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시점검을 통해 제설함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소상공인 안전성검사 지원 서울시, 유해성 유무 확인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구두 등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와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시는 소상공인이 경쟁력 갖춘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가 안전성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왔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 주기가 짧다. 시는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